

광주 국세청 등에 ‘고액체납 특별 기동반’ 신설 논스톱 관리

새 정부 첫 세무관서장 회의, 탈세 끝까지 추적·불공정거래 엄단
세금 컨설팅·탈세 적발 등 AI 대전환 작업...2028년부터 개시 목표

국세청이 광주 등 지방청에 ‘고액체납자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논스톱 관리하고, 민생침해·불공정 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엄단에 나선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세청 전용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도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등을 신설해 체납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단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 상주 기간은 최소화하고 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은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주요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가장 먼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탈세, 주식시장 교란 등 불공정 자본거래와 서민경제를 약화한 민생침해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과 해외 재산 이전 등 신종·역외탈세도 강력히 대응하고, 조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주택 취득 자금출처, 고가 아파트 중여세 회피 등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

로 집중한다.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도 강화한다. 첫 검증 사례로 지난해 감보다야 스캠 범죄에 연루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업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과세당국은 환전 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 실태 전수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한다.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 확인부터 추적조사, 체납 징수까지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관리한다.

특별기동반은 서울청·중부청에 각 2반과 광주지방국세청 등 5개 지방청에 1반씩 설치한다. 1반당 6명으로 모두 54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5급 변호사 2명과 6급 세무직 2명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회’도 신설한다.



임광현(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관서장들과 함께 고액 체납 추적 특별기동반 발대식을 열고 선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여건에 따라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고, 세

무조사 기업의 상주 기간도 최소화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요 업무의 AI대전환 작

업도 진행한다. 우선 AI세금 업무 컨설턴트, AI탈세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예산은 서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과제를 개발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행정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HS효성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실리콘 음극재 사업 본격 진출

2000억 투자 글로벌 자회사 인수
반도체·정밀 화학 등 사업 확장

HS효성그룹이 글로벌 소재 기업 자회사 인수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원천기술과 지적 자산을 기반한 가치 극대화’를 강조해 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가치 경영’이 이룬 성과라는 평가다.

HS효성은 “지난 31일 1억 2000만 유로(2000억원)를 투자해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재 기업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하고 유미코아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당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미코아는 100년 넘는 역사와 첨단 소재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촉매,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생산 능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대두되는 희토류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가 라듐, 우라늄 등 연구 활동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음극에 적용되는 소재로 기존의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소재로 꼽힌다.

또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효율 개선, 주행 거리 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어서 세계 완성차·배터리 제조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다. 특히 음극재 이외의 다른 소재 영역이 기술적 한계에 이르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미래 배터리 혁신에 가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다.

세계 배터리 시장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신차 판매의 20% 이상이 전기차였고 올해 25%, 2030년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상(가운데) HS효성 부회장과 바트 삼(왼쪽에서 세번째) 유미코아 CEO가 지난 31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벨기에 현지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인공지능 혁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로보틱스, 드론 등 새로운 수요처까지 추가돼 배터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음극재 시장은 이들 산업에 필수적인 배터리팩 용량 증대, 고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 수요 등에 적합한 실리콘 음극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큐와이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억달러에서 연평균 40% 가까이 성장해 2031년에는 4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조사기관인 SNE 역시 2035년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 규모가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HS효성이 이번 투자로 확보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화장품 소재 등 정밀 화학 분야 등까지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HS효성의 실리콘 음극재 시장 진출은 반도체, 조선, 방산 등과 함께 성장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코아 자회사 인수는 조현상 부회장의 가치 경영 철학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부회장은 평소 기술과 지적 자산 확보를 통해 고부가 가치 트폴리오를 지향하고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가치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차세대 AI로 불리는 엔터프라이즈 AI, 피지컬 AI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적 자산을 보유한 세계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유미코아를 수차례 방문했으며 계약 기간인 10월 말을 맞추기 위해 ABAC(APEC 공식 기업 자문 기구) 의장을 맡고 있던 APEC 준비 시기에도 여러 차례 양사의 철야 미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HS효성은 이번 인수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첫 투자처는 60년 전 효성그룹의 모태가 된 울산공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

방산 하도급 갑질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체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자료 유출,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체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의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항공업계에 이런 혐의가 잡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

주택 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줄인다

정부, 관련 기준 개정 행정예고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이며, 사업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

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담률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은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물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경감한다.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낮추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코스피 4200대 돌파...역대 최고치 또 경신

반도체주 중심 개인 매수세 영향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200대를 돌파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개인 순매수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4.37포인트(p) 오른 4221.87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최고치로, 코스피 상승폭 역시 지난 4월 10일(151.36p) 미국 상호관세 90일 유예 소식으로 인한 상승 이후 7개월만에 가장 큰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86p(0.39%) 오른 4123.36으로 출발해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수는 전장보다 15.86포인트(0.39%) 오른 4123.3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4221.92를 기록해 지난달 30일 장중 기준 최대치(4146.72)를 넘어섰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개인투자자와 기관이 견인했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6512억원, 1854억원 순매수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7949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형주의 선전

이 눈에 띄었다. 국내 시가총액(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11만 11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3.35% 오르며 ‘11만 전자’에 안착했으며, 시총 2위 SK하이닉스 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11%나 급등하며 6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섰다. 효성중공업도 9%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주말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장중 조선·방산 대형주들이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공계 석·박사 43% “3년내 외국 이직 고려”...금전적 요인이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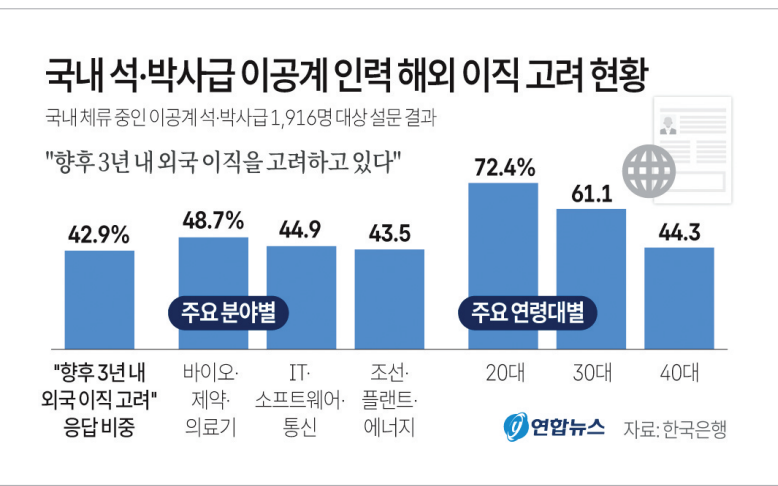
20대 72%·30대 61% 탈출 의향
해외체류 만족도 국내체류 1.5배

우리나라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은 외국으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우리나라 이공계 석·박사급 19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9%는 구체적 외국 이직 계획을 수립했거나 현재 인터뷰 등을 진행 중이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48.7%)에서 이직 고려율이 가장 높았고, IT·소프트웨어·통신(44.9%)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43.5%)조차 40%를 넘었다.

연령대 중에서는 20대(72.4%)·30대(61.1%)·40대(44.3%) 순으로 해외 이직 의향이 강했고,



실제로 계획을 짜고 있는 인력의 비율은 30대(10.4%)에서 가장 높았다.

이직을 원하는 이유(1~3순위)를 묻자 66.7%(3순위까지 합)가 금전적 이유를 꼽았고, 연구 생태계·네트워크(61.1%)·기회 보장(48.8%)·자녀 교육(33.4%)·정주 여건(26.1%)이 뒤를 이었다.

년 차에 최고점(12만7000달러)을 찍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이직 요인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니 소득·고용안정·승진기회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5점 척도 기준 1단위 상승)되면 해외 이직 확률은 각 4.0%포인트(p), 5.4%p, 3.6%p 낮아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